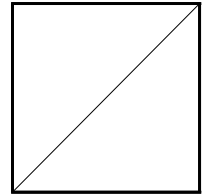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22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6. 24. (제 12 차)	

신한금융투자(주)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1. 6. 24.

1. 의결주문

신한금융투자(주)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신한금융투자(주)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초과’, ‘투자광고 절차 위반’,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프로그램 변경통제 위반’에 대하여 신한금융투자(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감봉 3월’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1)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및 제2항

「(구)자본시장법(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57조
(투자광고) 제6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5의2호

「(구)자본시장법(2017.4.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449조
(과태료) 제1항 제25의2호, 제28호, 제29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과태료) 제1항 제1호

○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 거래) 제3항

「금융실명법」 제5조의2(행정처분) 제3항 제2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구)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60조(투자광고) 제3항 제3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구)자본시장법 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2838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3>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9호 나목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5호 가목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호

「(구)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절차) 제1항 제3호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프로그램 통제) 제3호, 제6호
-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3>
-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 <별표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24차~제26차 제재심의위원회(2020.10.29., 11.5., 11.10.) 심의필
- 제21차, 제2차, 제3차 및 임시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2020.11.25.,
2021.1.20., 2.3., 2.8.) 심의필

<별지>

신한금융투자(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신한금융투자(주) : 과태료 2,240백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초과, 투자광고 절차 위반,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프로그램 변경통제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제108조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구)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제449조 제1항 제25호, 제29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1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제99조 제4항 제7호, 제109조 제3항 제10호, 제390조, <별표22>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제390조, <별표2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3>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1항 제3호, 제4-20조 제1항 제9호 나목, 제4-77조 제15호 가목, 제4-93조 제10호
「(구)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1항 제3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3호, 제6호

□ 직원에 대한 조치

- (부부장 ■■■) 과태료 7.5백만원 부과*
- (책임연구원 ▲▲▲) 과태료 4.5백만원 부과*
- (연구원 ■■■) 과태료 1.5백만원 부과*
- (前연구원 ㉑㉑㉑)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 (대리 □□□)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 (대리 田田田) 과태료 1.5백만원 부과*
- (디렉팅매니저 ▽▽▽)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 (파트장 ◇◇◇) 감봉 3월 및 과태료 14.2백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49조 제2항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8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5조의2 제3항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제390조, <별표22>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2. 조치사유

가.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초과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업자의 계열회사 주식을 개별 투자일임 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데도,
- ○○○○ 및 ●●●지점은 2016.×.××.~2017.××.××. 기간 중 ◇개 계좌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의 주식을 개별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최소 ④%p~최대 ⑨⑨%p)하여 편입한 사실이 있음

나. 투자광고 절차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 ◇◇◇◇ 등 28개 부·지점은 2016.×.×.~2019.×.×. 기간 중 xxx명의 직원이 ○○○건의 투자광고 문자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다.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 등 15개 부·지점에서는 2016.×.××.~2019.×.××. 기간 중 ☆☆명의 직원이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총 ㉸㉸㉸㉸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는 상품을 홍보한 사실이 있음

라.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 ■■■■■지점은 2019.×.××. 투자자 ○○○에게 △△△△- ELS-
❖❖❖❖❖ 약 ◆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투자자에게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경우가 아님에도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마.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 (1) ▷▷▷센터 부부장 ■■■은 2018.×.××. ~ 2019.×.××. 기간 중 타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 ㉹㉹㉹부 책임연구원 ▲▲▲는 2017.××.××. ~ 2018.×.××. 기간 중 타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3) ■■■■부 연구원 ■■■는 2019.××.××. 타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4) □□□□부 前 연구원 ■■■는 2017.××.××.~2018.×.××. 기간 중 타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5) △△△△부 대리 □□□□는 2017.××.××. ~ 2018.×.×. 기간 중 타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6) ××××××셀 대리 田田田는 2018.××.××. 타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7) ◆◆◆◆◆부 디렉팅매니저 ▽▽▽은 2018.×.××. ~ 2019.×.××. 기간 중 타인명의 · 자기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8) ●●●●● 파트장 ◇◇◇은 2016.×.××. ~ 2019.××.×. 기간 중 타인명의 · 자기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바. 프로그램 변경통제 위반

-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하는데도

(가) 신한금융투자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및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등의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거나, 프로그램 등록·변경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여 2016.×.×., 2018.×.××. 총 ●건의 장애가 발생하여 약 ◇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나)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및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등의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거나, 책임자 승인 또는 등록·변경 내용의 정당성에 대한 제3자의 검증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여 2016.×.×.~2019.×.××. 기간중 총 ㉔건의 장애가 발생하여 약 ㉔㉔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참고 : 프로그램 변경통제 위반 내역 >

- **(충분한 테스트)** 자금이체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테스트를 실시 않아 자금이체가 불가하거나, 파생상품 주문 프로그램을 변경한 후 테스트를 실시하여 운영시스템에 반영하였으나 파생상품 주문화면에서 장애 발생
- **(제3자 검증)** 프로그램 개발자가 아닌 제3자가 프로그램 변경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반영하거나, 테스트를 완료한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반영시 일부 프로그램을 누락

(붙임1)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음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57조(투자광고) ⑥ 그 밖에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5의2. 제57조제6항(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4.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5의2. 제57조제6항(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28.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 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9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③ 법 제108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10. 그 밖에 수익자의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저. 법 제63조제1항(법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법 제449조 제2항	250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60조(투자광고) ③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3.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

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버. 법 제57조제6항(법 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5호의2	10,000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2838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보. 법 제57조제6항(법 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5호의2	3,000
조. 법 제63조제1항(법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8호	250
토. 법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9.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함

(1)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가. 지분증권의 경우 : 각 투자일임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10.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

□ 구 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절차) ① 영 제60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는 것을 말함

3.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을 것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 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2(행정처분)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②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1항제1호	3,000
바.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0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함

1. 인력, 조직 및 예산 부문
2. 건물, 설비, 전산실 등 시설 부문
3. 단말기, 전산자료,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
4. 그 밖에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프로그램 통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3.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을 것
6.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할 것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

-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 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 중대 : 사회 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없는 경우 등

- ** 상 :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중 :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나. 감경 사유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I-1.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1. 관련자의 구분

금융실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① 행위자 :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자
- ② 감독자 : 위반행위인 그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 ③ 보조자 :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시를 추종한 자

2. 관련자에 대한 조치기준

① 법 제3조 위반행위(금융실명거래 위반)

거래금액(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금액. 다만 증권거래계좌의 경우에는 입금액을 말한다)의 다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책임정도*		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유형①	5천만원 이하	견책	주의 이하	주의 이하
	3억원 이하	감봉 이상	감봉 이하	감봉 이하
	3억원 초과	정직 이상		
유형②		주의 이하	-	-

* 유형① : 차명거래, 고객 동의 없는 임의계좌 개설 등 금융실명거래의 기본 취지를 위반

유형② : 실지명의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거래로서 단순절차 위반

(단순절차 위반행위 사항을 시정하는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현지조치 포함) 가능)

5. 가중 및 감경

- 가. 법 제3조 위반행위 관련 계좌수가 5계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나. 제재를 받은 자가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다. 삭제
- 라. 단위부·점내에서 위반사실을 스스로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마. 경미한 위반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붙임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신한금융투자(주)

2. 제재조치일 : 2021. 6. 2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2,240백만원)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직(3월) 및 과태료 부과(11백만원) 1명○ 감봉(3월) 및 과태료 부과(14.2백만원) 1명○ 감봉(2월) 및 과태료 부과(7.5백만원) 1명○ 견책 1명○ 견책 상당 1명○ 주의 4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4.5백만원) 1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3백만원) 1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1.5백만원)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및 과태료 부과(3백만원) 1명○ 과태료 부과(3백만원)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8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초과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업자의 계열회사 주식을 개별 투자일임 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데도,
- ○○○○ 및 ●●지점은 2016.×.××.~2017.××.××. 기간 중 ◇개 계좌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의 주식을 개별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최소 ①%p~최대 ⑤⑤%p)하여 편입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5호 가목

나. 투자광고 절차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 ◇◇◇ 등 28개 부·지점은 2016.×.×.~2019.×.×. 기간 중 xxx명의 직원이 ○○건의 투자광고 문자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구)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2.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3. 「(구)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제3호

다.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 등 15개 부·지점에서는 2016.×.××.~ 2019.×.××. 기간 중 ☆☆명의 직원이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총 ☒☒☒☒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는 상품을 홍보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

라.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 ☐☐☐☐☐☐☐지점은 2019.×.××. 투자자 ○○○에게 △△△△- ELS- ♣♣♣♣♣ 약 ◆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투자자에게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경우가 아님에도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9호 나목

마.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1) ▷▷▷▷센터 부부장 ■■■■은 2018.×.××. ~ 2019.×.××. 기간 중 타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 ㉹㉹㉹㉹부 책임연구원 ▲▲▲는 2017.××.××. ~ 2018.×.××. 기간 중 타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3) ■■■■■부 연구원 ■■■는 2019.××.××. 타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4) ㉸㉸㉸㉸부 前 연구원 ㉸㉸㉸는 2017.××.××.~2018.×.××. 기간 중 타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5) ◁◁◁◁부 대리 □□□□는 2017.××.××. ~ 2018.×.×. 기간 중 타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6) ☒☒☒☒☒셀 대리 田田田는 2018.××.××. 타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7) ◆◆◆◆◆부 디렉팅매니저 ▽▽▽은 2018.×.××. ~ 2019.×.××. 기간 중 타인명의·자기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8) ●●●●● 파트장 ◇◇◇◇은 2016.×.××. ~ 2019.××.×. 기간 중 타인명의·자기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3.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바. 프로그램 변경통제 위반

- ☐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하는데도

(가) △△△△△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및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등의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거나, 프로그램 등록·변경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여 2016.×.×., 2018.×.××. 총 ●건의 장애가 발생하여 약 ◇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나)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및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등의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거나, 책임자 승인 또는 등록·변경 내용의 정당성에 대한 제3자의 검증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여 2016.×.×.~2019.×.××. 기간중 총 ㉔건의 장애가 발생하여 약 ㉔㉔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법규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전자금융과	금융투자검사국 디지털금융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53 02-2100-2811	02-3145-7015 02-3145-7432